윤 대통령 "영웅들의 희생·헌신 왜곡은 반국가행위"

'태극 배지' 착용 국무회의 참석
野 천안함 논란 발언 겨냥
전 정부·시민단체 보조금 비난도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는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국가 행위이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담고 있는 헌법 정신의 실천이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보훈의 달 6월"이라며 "국가 품격은 어떠한 인재를 배출하느냐보다 누구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 대한민국은 자신을 던져 나라와 국민을 지켜낸 영웅들의 피 묻은 군복 위에 서 있다"며 "제복 입은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이달 초 더불어민주당 이래경 혁신위원장이 '천안함 자폭' 발언 등으로 9시간 만에 사퇴하고, 권칠승 당 수석대변인이 그 과정에서 최원일 전 천안함장을 향해 "무슨 낯짝" 등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일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이날 모두 가슴 쪽에 '121879 끝까지 찾아야 할 태극기' 배지를 착용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식 때 가슴팍에 달았던 배지다. 태극기 문양을 바탕으로, 가족에게 돌아오지 못한 국군 전사자 12만1879명을 기억하자는 의미를 담아 제작된 배지다.

이날 국무회의는 국가보훈부 출범 후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참석한 첫 국무회의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보조금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 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 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부정과 비리의 토양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 원의 국가채무가 쌓였다"며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며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행위"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잘못된 것은 즉각 제대로 도려내고 바로잡는 것이 정부 책무"라며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며 "향후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 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무분별하게 늘어난 보조금 예산을 전면 검토해 내년도 예산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첨단산업 인재를 길러내려면 대학이 혁신적으로 변해야 한다"며 대학을 중심으로 한 교육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한편, 장마철을 앞두고 재난안전 대책을 재점검하라고 당부했다.

국토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마무리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하는 한편, 지난해 집중호우 당시 지시한 디지털 홍수 경보 시스템의 조속한 완성에도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TV 수신료' 이어 집회·시위 제재 강화 국민참여토론

7월 3일까지 '국민제안 누리집'

대통령실은 13일 "소음 단속 강화 등 집회·시위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주제로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집회·시위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 ▲소음 단속기준 강화 ▲출퇴근 시간 도로나 대중교통을 점거하는 방식의 제한 ▲심야·새벽 시간 제한 ▲주거지역·학교·병원 인근 제한 ▲위법 집회에 대한 과태료·벌칙 등 강화 등을 국민들이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를 주제로 한 토론은 국민 누구나 이날부터 7월 3일까지 '국민제안 누리집'을 통해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토론이 종료되면 제시된 의견을 점검·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제안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발제문을 통해 찬반 양론을 소개하기도 했다.

제재 강화 ±찬성 측에서는 "현행법은 집회의 자유에 치우쳐 건강권·사생활의 평온 등과 균형을 이루지 못 한다", "제재 수단이 미흡하다", "헌법의 범위 내에서 상충하는 법익 간 조화로운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 등 의견이 있다고 소개했다.

반대로 현행 유지나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측에서는 "우리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다른 기본권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현행법은 사전신고, 소음기준, 제한통고 등 집회·시위에 대한 규제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 등 의견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앞서 도서정가제 완화 방안(1월 19일~2월 9일), TV 수신료 징수 방식(3월 9일~4월 9일) 등을 주제로 국민참여토론을 두차례 실시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당정,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축소 제안

"민주 무이자 대출법은 포퓰리즘 "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대학생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한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더불어민주당에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재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의 적용 대상을 축소하자는 제안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관련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지난달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처리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모든 대학생에 대해 소득 8구간까지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면 매년 이자 비용이 860억원 규모로 국민 세금으로 들어가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이어가기 힘든 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는 데 공감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당정은 취약 계층 대학생에 대해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와 더불어 국가 장학금, 근로 장학금, 저리 생활비 대출 확대 등을 추가해 패키지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박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당정은 기초·차상위 가구의 경우 모든 자녀에 대해 등록금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중간 계층에 대해서도 지원 한도를 인상하고, 저소득층 지원 규모를 늘려 국립대 등록금 수준 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근로장학금 대상 대학생을 확대하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도 추가로 인상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오늘 논의된 지원안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하고, 입법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힘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신상공개 확대…형량도 강화"

"보복 두렵다는 피해자 호소 답해야"

국민의힘은 13일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 형법상 형량을 대폭 강화하고 가해자 신상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가해자의 인권보다 중요한 것은 선량한 피해자의 일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피해자는) 아직도 불안과 공포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지 못한다고 전해지고, 재판이 끝난 뒤에 보복이 두렵다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며 "우리는 이 호소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먼저 가해자가 보복을 암시하면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할 경우 형량을 대폭 강화하는 형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사적 제재'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신상 공개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항소심 재판부가 가해자 신상 공개를 명령했지만, 언제 가능할지는 미지수"라며 "검찰이나 피고인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천인공노할 범죄와 관련해선 신상 공개 기준을 완화하겠다"며 "가해자의 보복이 우려되는 강력범죄에 대해선 피해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밝히지 않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연합뉴스